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인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동참해주세요

2026년 제 01호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01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 분야 연습생·청소년 표준계약서 2종 개정 고시

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02

포항 오천읍 A초교 반 대항전 체육수업 논란... 학습권·교육과정 훼손 우려

영남경제신문 김소현 기자

03

'체육대회에서 유소년까지' 인구 3.6만 영월이 스포츠로 미래를 준비하는 법

풋볼리스트 김동환 기자

04

안양시, 군인·경찰·소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

전국매일신문 배진석 기자

05

파크골프 열풍의 그늘...'시설·대회 급증에 재정·세대 갈등'

매일신문 윤영민 기자

체육시민연대 새해인사



적토마처럼 힘차게 비상하세요!

숨 가쁘게 달려온 2025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롭게 밝은 2026년은 '붉은 말의 해'라고 해요.
지치지 않는 열정의 적토마처럼 올 한 해 체육시민연대도
체육 분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열심히 달려 나가겠습니다.
회원님들의 일상도 에너지 넘치는 행복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체육시민연대



2025년도 기부금 영수증 안내

한 해동안 체육시민연대는 회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체육시민연대를 믿고 지지해주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월 15일까지 회원님들의 메일로 일괄 발급드릴 계획입니다
해당 기간 이후에 메일을 받지 못하셨거나, 자동이체가 아닌 방법으로
후원해주신 회원분들은 메일 주소 sports-cm@hanmail.net 으로
성함·전화번호·주민번호(앞자리)·주소를 보내주시면 신속하게 발급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01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 분야 연습생·청소년 표준계약서 2종 개정 고시

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2026.01.04.06:15

사진=한국강사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연습생과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현장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등 표준 계약서 2종의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1월 1일(목)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에는 올해 8월 1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대상 금지 행위를 구체화하고, 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들을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하고 청소년과 연습생의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에서는 정신건강 보호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연습생에게 ‘극도의 우울증세 등’이 있을 때만 허용되던 치료 지원 가능 범위를 ‘우울증세 등’으로 확대해 기획업자가 연습생의 동의를 전제로 적절한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해제·해지 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벌 지급 기한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 이내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한’으로 명확히 규정해 분쟁 예방 효과를 높였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서는 신체적·정신적 건강권과 학습권 등 기본적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이 대폭 추가됐다. 우선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을 강요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고, 폭행·협박뿐 아니라 폭언과 강요, 성희롱·성폭력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행위를 모두 금지 행위로 확대했다. 또한 보건·안전상 위험이 있음에도 촬영이나 공연 등 용역 제공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해 청소년의 안전 확보 실효성을 높였다. 더불어 기획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해당 내용을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새로운 조항이 신설됐다.

문화체육관광부

01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이 연습생과 청소년 예술인의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기획업자와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표준계약서는 대중문화산업 현장에서 가장 널리 참고되는 기준 문서인 만큼, 법령과 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연습생과 청소년 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계약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포항 오천읍 A초교 반 대항전 체육수업 논란… 학습권·교육과정 훼손 우려

영남경제신문 김소현 기자

2025.12.30.20:05

사진=영남경제신문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반 대항전 중심 체육수업을 둘러싸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육과정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학교에서는 발야구·축구·배구 등 스포츠 경기를 중심으로 한 체육활동이 잦은 대회 형태로 운영되며, 체육수업이 반별 승패를 가르는 대항전 구조로 상시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경기 준비와 진행을 이유로 국어·수학 등 주요 교과 수업이 축소되거나 다른 시간으로 대체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학생의 학습권과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한 국가 교육과정 준수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교과를 편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5조는 수업일수와 교과 시수 준수를 명시하고 있다.

정서적 측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반 대항전이 반복되면서 운동 능력이 뛰어난 일부 학생을 중심으로 우월적 행동이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운동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경기 이후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너 때문에 졌다”, “왜 그렇게 못하느냐”는 등의 핀잔과 질책을 듣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초등학생은 신체 발달과 운동 능력의 개인차가 큰 시기임에도, 승패 중심의 체육수업 구조가 실수와 패배의 책임을 특정 학생에게 집중시키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체육 시간이 협동과 참여의 장이 아닌 위축과 불안의 시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잦은 경기 운영으로 수업 집중도가 저하되고 교과 학습의 연속성이 무너지는 등 사실상의 수업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학생 선수의 잦은 대회 출전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관리·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내 경기 운영 역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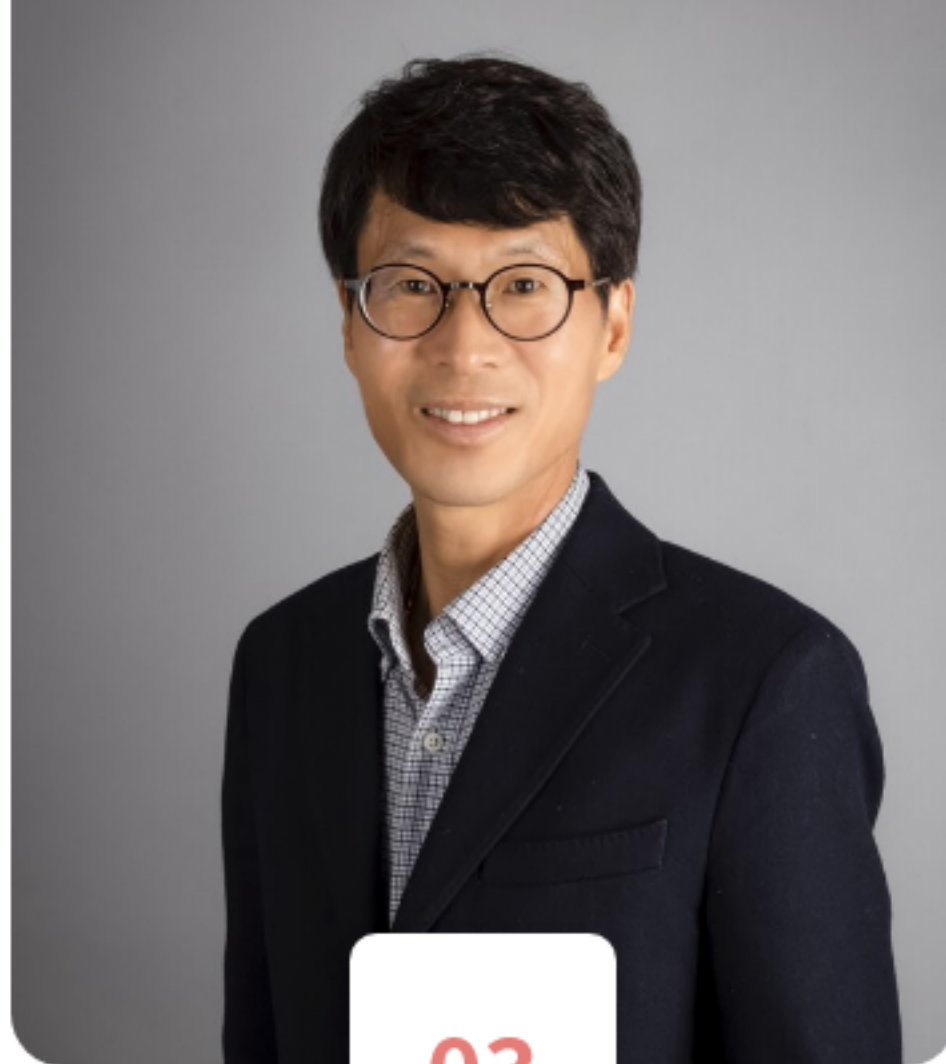
오천읍 A 초등학교의 체육수업 운영 실태는 해당 학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 내 다수 초등학교에서도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논란은 지역 초등학교 체육수업 전반에 고착화된 경쟁 중심 수업 구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사실관계 확인과 학교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A 초등학교에 공식 질의서를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정규 교과 수업이 체육활동으로 대체되거나 수업결손이 발생한 사례는 없다”고 답변했다.

포항교육지원청에도 질의한 결과, 교육지원청은 “체육수업 운영은 단위 학교의 자율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경쟁이 과도해질 경우 학생의 학습권과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반 대항전 중심 체육수업에 대한 별도의 실태 조사나 점검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03

'체육대회에서 유소년까지' 인구 3.6만 영월이 스포츠로 미래를 준비하는 법

풋볼리스트 김동환 기자

2025.12.30.14:56

사진=영남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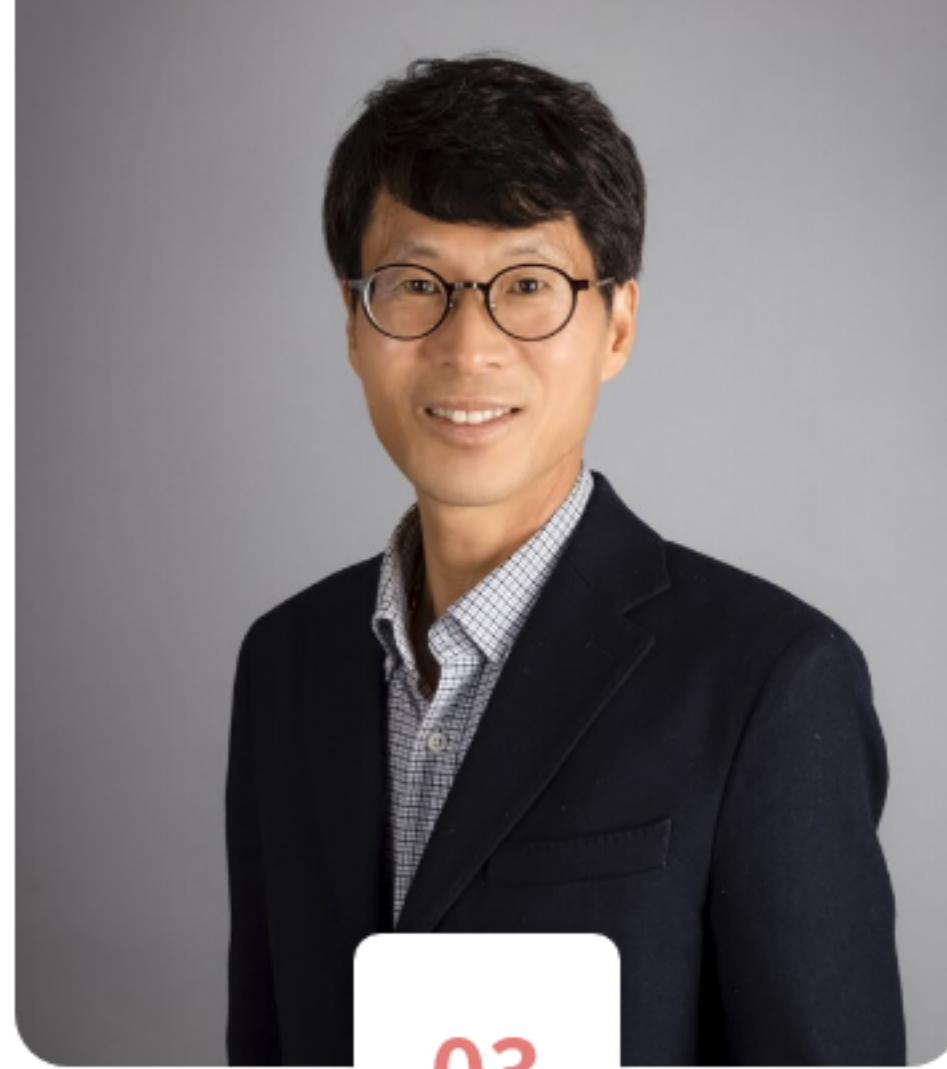
김성수 영월군체육회장이 체육을 바라보는 관점은 분명하다. 체육은 기록이나 성적을 넘어, 사람과 지역을 다시 연결하는 매개라는 것이다. 체육대회와 유소년 체육을 중심으로 한 영월군체육회의 방향 역시 ‘사람이 모이고, 머물고, 다시 찾는 지역’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방 소도시에서 체육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영월군의 인구는 3만 6천여 명이다. 영월군 체육회는 체육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대 간의 단절을 잇는 데 주목하고 있다.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지역 일상 속에 스며드는 체육 환경 조성이 핵심이다.

김성수 회장은 “체육대회는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않는다”며 “선수와 가족, 지도자들이 지역을 찾으면서 숙박과 식사, 관광이 함께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접점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경험이 쌓이면 영월은 ‘경기만 하고 떠나는 곳’이 아니라 ‘다시 오고 싶은 곳’이 된다”고 덧붙였다.

영월군은 비교적 여유로운 공간과 자연환경을 강점으로 삼아, 참가자들이 경기에 집중하면서도 지역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영월군체육회는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체육대회를 지역 상권과 관광, 학교와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운영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

체육회가 또 하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유소년 체육이다. 김성수 회장은 “아이들이 운동장을 찾고, 지역 대회에 참여하는 모습 자체가 지역의 미래”라며 “유소년 체육은 단순한 엘리트 육성이 아니라, 아이들이 지역 안에서 성장하는 경험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03

영월군체육회는 유소년 체육의 방향성을 ‘경쟁보다 경험’에 두고 있다. 다양한 종목을 접하고, 승패에 대한 부담보다 도전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회장은 “체육은 일부 아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누려야 할 성장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교체육과 지역 체육회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방과 후 프로그램과 주말 리그, 지역 단위 대회를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지역 체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학교가 교육의 중심이라면, 체육회는 경험을 확장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설명이다.

김성수 회장은 “아이들이 운동장을 찾고, 가족이 함께 경기를 보고, 어르신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풍경이 많아질수록 지역은 살아난다”며 “체육은 가장 건강한 방식으로 사람을 모으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영월군체육회는 체육을 통해 사람을 남기고, 관계를 남기는 역할을 해나가겠다”며 “군민과 체육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영월 체육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영월군은 2023년 민선 2기로 취임한 김성수 회장과 체육회의 노력에 힘입어 레포츠클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 수요가 대폭 증가했다. 뿐만아니라 축구, 씨름, 야구, 테니스 등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과 유소년 대회를 유치해 지역 경제 효과 창출로 인근 지자체 및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안양시, 군인·경찰·소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

전국매일신문 배진석 기자

2025.12.30.10:43

사진=안양시청(전국매일신문)

경기 안양시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이 내년부터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받는다.

안양시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안양시의회 제30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사 이하 군인에게만 일부 시설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감면 제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직업군인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관내 기관에 근무하는 해당 직군은 시 운영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시설은 공공 테니스장과 수영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이다. 안양시는 국가 안보와 치안 유지, 재난 대응 등 공공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인력을 공식적으로 예우하고 복지와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광동윤 안양시의원 발의로 추진됐으며, 공포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양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시민과 대상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체육시설 운영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인력을 제도적으로 예우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파크골프 열풍의 그늘...'시설·대회 급증에 재정·세대 갈등'

매일신문 윤영민 기자

2025.12.30.10:43

사진=매일신문DB

파크골프 시장이 짧은 기간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부작용도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고령층 여가 확대라는 정책 취지 뒤편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체육단체 간 운영권 갈등이 불거지고, 재정 부담과 세대 형평성 논란도 함께 커지는 양상이다.

일부 지자체에선 시설 운영권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안동시의 경우 파크골프장 운영권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파크골프협회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안동시는 파크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보고 전면 무료 개방과 직영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협회 측은 시설 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회원 중심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하천부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을 협회에 위탁 운영 방식이 하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낙동강유역환경청까지 개입하면서 논란은 행정·법적 문제로까지 확산됐다.

영주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한 차례 불거졌다. 파크골프장 운영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운영 정상화 방안을 권고하기도 했다. 당시 특정 단체 중심의 운영이 일반 시민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과, 공공시설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파크골프 인구 증가가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표심)와 맞물리며 시설 확대 경쟁 및 운영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단계에선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준공 이후 잔디 관리와 인력 운영, 시설 보수 등 유지관리비는 대부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혈세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일부 지자체가 유료화를 선택하고 있지만, 거주 주민 기준 이용료는 3천~6천원 수준으로 대부분 1만원을 넘지 않는다. 여기에 연령 할인까지 적용되면 운영비 충당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대 간 인식 차이도 논란의 한 축이다. 파크골프의 주 이용층이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집중되면서, 청년층 사이에서는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 예산이 특정 연령대 생활체육 시설 확충에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과연 형평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한 체육단체 관계자는 "파크골프가 진정한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으려면 상금과 규모 경쟁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와 지속 가능한 운영에 초점을 맞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체육 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여러분의 후원이 건강한 스포츠 사회를 만듭니다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인권과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후원: 국민은행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